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reat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35호 1판 (음력 8월 26일)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소쇄원의 가을 풍류 … 달빛 춤사위

24일 오후 담양 소쇄원 제월당에서 '소쇄원의 풍류정원, 달빛 춤사위'가 열린 가운데 한승철 춤꾼이 날렵하고도 우아한 이매방류 한량무 '사풍정감'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풍류남도 나들이' 의 하나로 매월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소쇄원 일대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리공무원들 징계부과금 전남, 13억 중 1억만 냈다

중징계 전 재산 빼돌린 듯
광주는 68% 납부 '대조'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부가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년여 동안의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13억5216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납부내역은 금액대비 전체의 8.02%인 1억838만원(53건)이었다. 나머지 11억1943만원(82.79%·3건)은 결손금액이었으며, 아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1억2433만원(9.2%·6건)이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총 결손처리 금액은 15억7200만원인데, 이중 전남도가 71.2%(11억1943만원)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전남도 공무원은 지방해양수산 5·6급 각각 1명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그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징계부가금 1540만원 중 1044만원(67.8%)을 납부했으며 495만원(32.2%)은 미납된 상태다.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적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재수 해임안 통과…靑 "수용 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與 "국감 거부·의장 형사고발" … 野 "오만과 불통의 극치"
강 대 강 대결에 민생 실종 … 靑 거부 땐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또 여당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으며 야당은 단독 국감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는 등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헌정사상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가세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민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김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맞섰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입장을 시사해온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셈이다. 이는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다.

새누리당도 우선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키로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심지어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형사고발까지 추진하는 초강수를 준비 중이다.

이에 야당은 민생을 우선시해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김 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자 민의를 외면한 것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55년 최초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래 청와대가 국회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의 법적 통보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대통령께 거듭 진언드린다.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혼자 가면 실패한다. 국민과 국회, 야당과 함께 가면 성공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융·철도·의료·현대차…불붙는 노동계 秋鬪

성과연봉제 갈등으로 인한 금융노조의 하루 총파업에 이어 철도와 의료, 공공 부문 등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2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와 동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코레일과 노조가 성과연봉제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의 동시 파업으로 진행된다. 공공운수 노조는 조합원만 6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고객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1994년 이후 22년 만이다.

오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약 1만명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해당 노조에는 경희의료원등 사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등 공공병원이 속해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편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 기아차 노조는 27일 본교섭 결과에 따라 향후 파업 등 일정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경찰 물대포' 백남기 농민 숨져 ▶6면
리아스식 해안-영산강의 눈물 ▶18면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8강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호 소 문

광주운암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교육청의 태도 변화 및 과다한 협의 요구(약 400억원 이상 추가비용 추정)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차례 유보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장님과 150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일관되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광주시교육청의 탁상행정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유린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150만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저희 운암3단지재건축 사업은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예산도 국비로 시행하였으며, 단지 내에 있는 경양초교 학생수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2013년 9월에 관계기관인 시청과 시교육청이 확정하고 구역지정 고시시 교실 증설 및 통학버스 제공 등 세부 사항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정비구역지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단지 내 경양초교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와 2016년 도시계획 변경 안 심의 시 2013년 9월 협의는 원천 무효라는 것과 단지 내 2구역(근린공원) 옆에 대토해서 현재 학교부지 보다 큰규모로 신축하고 이를 기부 체납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협의사항이 부당함을 항변한 것은 물론, 현 교사 중 2개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약 2,400㎡ 지상 4층 건물 2개동(총 연면적 4,800㎡)을 신축하여 부족한 학급 수를 충족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안을 시교육청에 제시하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부터 2차례나 심의 유보를 통보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한다면 조합원(2,020세대) 1세대당 약 2,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부담되는 등 시교육청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억지입니다.
백년대계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인 학교 시설물을 시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 건립 비용을 떠안아야하는 조합원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3년 재임 중 협의 해 준대로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지표로 제시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의 부당한 요구를 운암3단지 2,020세대 조합원은 개탄하며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일동